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109호
2011. 10. 31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임연기
- 편집인 박삼철, 송유진
- 주소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106호
- TEL 041-850-0858
- E-mail kssea1@hanmail.net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따뜻한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서정화(홍익사대부속중 · 고등학교 교장)

근자에 ‘따뜻한 자본주의’가 경제계 특히, 대기업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 3의 길’로서 ‘자본주의 4.0’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貧益貧 富益富의 자유시장경제 하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여겨진다.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소득 분배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 간, 계층 간의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격차로 인한 불평등 계수를 나타내는 Gini 계수가 2003년부터 해마다 상승하여 2007년에는 0.3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말 조세와 재정 지출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영국이나 캐나다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점차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 사회적 통합이 깨지고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분노하는 시대’에 금융가의 탐욕을 규탄하는 ‘분노의 월계’ 시위 확산 등이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 기업론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을 포함하는 민간기관에서 복지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相生이라든가 ‘동반성장’ 또는 ‘공생발전’ 등의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사회공익재단이 설립되는가 하면 기업의 기부활동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

업이 공생의 자본주의 철학 하에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기업 총수들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교육복지 확충을 비롯하여 교육의 전 영역에 걸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학업성취평가라든지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정보공시제, 고교다양화 등이 그 예다. 단위학교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과교실제 도입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현장은 많이 변화되고 있다. 교육의 자율성 확대, 민주적 학교 운영,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 등이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여건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쁘고 산뜻한 최신식 학교 건물이 세워지거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前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地自體들의 단위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나 최신 교육 매체도 잘 제공되고 있다.

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사관리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학교 경영자들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수요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를 경영하고자 애쓰고 있고 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교사들의 노력과 인식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제반 주변 환경이나 조건, 인프라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학교현장에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허다한 문제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지나치게 정신적으로 심약하고 피곤해 있다. 적어도 각 반에 5% 정도는 초기 우울증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 진로, 친구 관계, 가정 형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할 것이다. 학교현장의 교수-학습방식이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별 수 없이 입시 준비 위주의 획일적인 암기위주의 수업 방식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양하는 교육 활동 수행이 그리 쉽지 않는 이유다.

학업에 대한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면학에 대학 의욕이 부족한 학생들이 허다하다. 일주일이 멀다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자퇴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또,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이전처럼 체벌을 할 수도 없다. 인권과 권리 의식이 크게 향상되선지 교사들의 지적이나 지도가 제대로 먹혀 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향한 집념과 도전의식, 인내심도 부족한 듯하다.

또,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도 지나치게 거칠다. 욕설을 함께 쓰지 않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다툼이 일어나고 폭력이 자주 발생한다. 학생들의 체력이 허약하여 걸핏하면

보건실에 드나드는가 하면 학교안전사고도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학교 상황이다.

이렇듯 허다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운 처지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개 차상위 계층, 조손가정 학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자아 정체감도 낮고 대인관계도 부드러운 것 같지 않다. 이들은 결손,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족관계도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 보인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불쌍한 학생들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다.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저소득층 학생들로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교육당국에서 그 동안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다.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단위교육청에서도 관련 정책 개발과 함께 문화적 체험활동이나 무상급식 등 행·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교육당국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학교는 어떤 점에서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불평등한 측면과 양극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場이다. 사회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학교 내에서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격차 및 양극화 문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다. 복지제도가 더욱 넓고 깊게 확충됨으로써 소위 ‘신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정망이 구축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의 복지 확대는 우선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과 관심 강화로부터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세일 교수는 ‘한국의 진짜 양극화 뒤쳐진 교육’이라고 진단하고 취업난과 소득격차의 해법을 바로 교육개혁에서 찾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뒤떨어진 학생들을 껴안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교육 양극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교육복지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경제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교육을 통한 복지 확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복지에 대한 정책이 강조되면서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도 더욱 증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명박 정부도 수월성 교육 진작에 주력하는 동시에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균형발전이라든가 격차해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정책 개발과 추진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단체나 모임, 기업 등 민간 기관의 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눔과 相生의 따뜻한 자본주의를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0. 7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특수교육, 학교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력은 학교나 교육당국의 힘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학부모, 지역사회, 동창, 기업체 등의 도움을 받을 때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기업체 등을 포함하는 민간 기관들의 도움과 협력은 무엇보다도 강화될 필요가 절실하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교육복지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민간기구나 단체의 교육복지 지원 증진을 위한 활발한 방향과 과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초점을 두고 학습부진아 기초학습, 다양한 체험학습, 가족 상담 및 문화 체험, 우울증 치료, 진로 체험 등과 관련되는 매뉴얼이나 지침, 구체적인 책자 등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민간기관과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단위의 교육지원청이 연계·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초학력이 미흡하고, 정서 심리적 상태 등이 위축되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의 적응을 돕고 건전한 인성 형성 및 학교생활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단위학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종교단체, 동창 등의 협력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행정기관별 민간 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역할을 분담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단위학교 간에 보다 긴밀한 networking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기업체 CEO 및 교육복지 관련 기관 간의 접촉 및 유대 강화가 절실하다.

넷째, 교육복지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기관들로 하여금 저소득층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야 할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기부 운동을 적극 벌여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할 사회적 책무의식을 적극적으로 고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업이나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각종 종교단체, 교육복지 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 관련 단체나 학계에서도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학교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하고 성숙한 선진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야 할 핵심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학교에서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 노력이 아닌가 한다.



I 논단 II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방안¹⁾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

박호근(한국체대 교직과 교수)

I. 서론

교육은 원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치된 교육행정기관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간에 교육에 대한 지원범위와 방법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을 빚어왔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민선 지방자치 5기가 출범한 2010년도에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두 후보자들이 시장과 교육감에 각각 당선됨에 따라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급기야 무상급식의 지원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시장 직을 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시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글은 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현황 그리고 그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연계 협력사업을 분석한다. 서울시 및 서울지역 25개 구의 교육협력 체제·조례 제정 현황·교육(발전)협의체 구성 현황, 교육지원청과 서울지역 25개 구 간의 연계 협력 제도 설치 현황, 예산지원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민선 5기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서울지역 25개 구청장 당선자들의 교육관련 공약사항과 이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및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근거로 분석하고, 서울시 및 서울지역 25개 구의 교육협력 우수 사례를 영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법적·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과제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II.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헌법」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원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지역교육청인 교육기관을 두어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고찰해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때, 법적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지만, 해당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관할 교육청 및 학교장과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동 법률을 살펴보면, 교육을 관장할 일차적 책임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르면, 교육을 행사할 권리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와 별도로 설치된 기관이 나누어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교육재정 지원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법률상으로 볼 때, 권리 행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 그리고 별도로 설치된 기관인 시·도교육청으로 다원화되어 있고, 최종 책임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운영상의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법정 교부금 외에 보조금 등 비법정 교부금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법적·제도적인 한계를 야기시키고 있다.

III.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연계 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서울시 및 서울지역 25개 구의 교육협력 체제 현황

서울시 교육협력국은 서울시의 교육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행정1부시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으며, 3과(학교지원과, 교육격차해소과, 평생교육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지역 25개 구는 과장(담당관) 25명, 팀장 92명, 419명의 직원이 교육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역 25개 구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25개 구마다 교육지원

부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18개 구가 '교육지원과' 라는 명칭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2. 서울시 및 25개 구의 조례 제정 현황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의 큰 틀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동 조례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연계협력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서울시의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 밖의 조례는 22개가 있다.

서울지역 25개 구별 교육관련 조례는 총 115개가 있으며, 주요 특징은 ① 민선 기수가 올라갈수록 교육관련 조례가 많아지고 있고, ②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는 민선 1기(강남구)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민선 4기에 완료되었으며, ③ 평생교육에 관련된 조례는 민선 3기에 3개 구를 시작으로 4기에는 나머지 모든 구에서 제정이 완료 되었다. ④ 학교급식(친환경 급식 포함) 관련 조례는 민선 4기와 5기에 집중되어 제정되었으며, 민선 4기부터 10개 구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⑤ 장학금 관련 지원 조례도 민선 기수가 올라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17개 구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⑥ 자치구와 교육청 간의 교육발전협의회 관련 조례 역시 민선 기수가 올라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7개 구에서 제정되었다. ⑦ 그 밖에 국제교육원, 인터넷 수능강의, 원격교육원(이상 강남구), 과학육성(영등포구), 통일교육(구로구), 대학생 임대주택(서대문구), 자기주도학습센터(강동구, 성북구) 등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특기할 만한 조례들이 제정되었다.

서울지역 25개 구의 교육경비 지원의 핵심이 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25개 구는 모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지원범위는 구별로 다양하였다(5% 이내 : 10개 구, 예산 범위 내 : 5개 구, 7% 이내 : 4개구, 기타 : 6개구).

3. 서울시 및 25개 구의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현황

서울시 교육협의체로는 「서울특별시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등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지역 25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의체로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교육발전협의회」가 있다.

4. 서울시 및 25개 구의 예산 지원 현황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학습환경 및 학교시설 개선 사업 1,277억 원(61.5%), 학교프로그램 지원 사업 623억 원(30.0%), 우수인재 양성사업 146억 원(7.0%) 등 총 2,07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서울지역 25개 구 예산 지원 현황 분석 결과, 민선 4기(2006-2010년)의 주요 특징은 ① 자치구별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07: 23.9배, 08: 15.0배, 09: 21.2배, 10: 13.0배)이고, ② 비법정

전입금 측면에서 볼 때, 해가 갈수록 비법정 전입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07: 17개 구, 08: 21개 구, 09: 24개 구, 10: 23개 구). ③ 강남구가 가장 많은 액수의 교육투자를 하여 지난 4년간 1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금천구는 4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④ 기초 자치단체 예산 규모(일반회계 기준) 대비 지원 비율로 보더라도 강남구가 2008년을 제외하고는 1순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초구 역시 5위권 이상에 있다. ⑤ 재정자립도 대비 지원비율로 보면, 중랑구는 재정 자립도가 타 구청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 2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5. 민선 5기 단체장들의 공약사항 분석

서울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립한 2011년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및 일반회계 사업 추진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23개 공약 내용 중 17개(73.9%)의 공약이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1년도 서울시 교육지원 중 많은 사업들이 서울시 교육청과 같은 사업 부문에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 자기주도 학습실 조성사업,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사업,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사업,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업,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울동행 프로젝트 사업,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사업, 우수인재 양성사업 등은 서울시 교육청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사업 추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지역 25개 구에 당선된 구청장들의 교육관련 공약과 그의 실행 여부를 각 구에서 제출한 「2011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분석한 결과, 총 95개의 공약 중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착실하게 실행되고 있는 공약은 55개 사업(57.9%), 공약 중 일부만 실행되고 있는 사업은 12개 (12.6%),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28개(29.5%)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강동구 100%, 성북구 71.4%, 성동구와 도봉구의 66.7%가 교육경비지원 기본계획에 구청장의 공약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25개 구의 2011년도 교육경비지원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179개의 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1순위는 '사교육비 경감 사업' (25개 구), 2순위는 '유아교육 강화 및 학교의 돌봄기능 확충 사업' (24개 구), 3순위는 '무상교육 확대 사업' 과 '지역사회 연계 및 교육 공동체 확충 사업' (23개 구), 5순위는 '학교폭력예방 사업' (22개 구), 6순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21개 구), 7순위는 '정규수업혁신 사업' (19개 구), 8순위는 '창의인재육성 사업' (18개 구), 9순위는 '혁신학교 지원 사업' (4개 구)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교육협력 우수 사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① 스스로 공부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② 유아교육지원 사업, ③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사업, ④ 학습준비물비 지원 사업, ⑤ 어린이보호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

⑥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⑦ 「학교 보안관」 제도 운영 지원 사업, ⑧ 대학연계 우수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⑨ 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서울지역 25개 구의 교육협력 우수 사례로는 ① 구청과 교육지원청간 연계협력 우수사례: 강동구(「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동구청과 강동교육지원청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실질적 업무 협의), ② 대학입시 지원 분야: 서초구(「서초구 입학정보센터」 설립·운영), 성동구(한양대학교 「지역우수자 전형제도」 제안 추진), ③ 지역사회 연계 분야: 서초구(외국인학교-덜위치칼리지 연계 사업), 성동구(「성동-한양 평생대학」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용산구(미8군 연계 영어교실 운영지원 사업), 서대문구(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운영), ④ 사교육비경감 사업 분야: 강남구(공교육 만족화 사업), 성동구(사이버 스쿨 운영 사업), ⑤ 무상교육확대 사업: 광진구(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 사랑의 교복나누기 사업), ⑥ 유아교육/학교 돌봄기능 확충 사업: 서초구(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유기농 우유 유치원 보급 지원 사업), 송파구(유치원 사업 지원 사업,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 및 초등학교 조기등교생 돌봄 교실 운영 지원 사업), ⑦ 학교폭력예방 사업: 강남구(초·중 학교내 상담센터 운영사업, 초등 학교보안관 운영사업), ⑧ 창의인재육성 사업: 강동구(우수인재 양성사업,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⑨ 정규수업 혁신 사업: 은평구(생태 친화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학습역량 강화사업), ⑩ 지역사회연계 및 교육공동체 확충 사업: 성북구(「성북예술창작센터」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아트캠프」, 자기주도학습 방학(여름/방학)캠프, 관내 대학교와 연계한 멘토링 사업), 도봉구(학부모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사업에 반영), ⑪ 혁신학교지원 사업: 마포구 등으로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서울시 및 서울지역 25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들 중에서 교육협력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은 서울시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의 협의 하에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토대로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법적·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적·제도적 측면

교육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 행정부, 지방의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1) 국회 차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동법을 개정하여 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별교부금은 그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 사업에 사용되는 등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교부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차액을 보통교부금에 합산하여 교부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2) 행정부 차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동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해야 하는 사업”으로 문구를 수정하여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시·도 의회 차원 :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조례’의 개정

동 조례상 서울시의 본 예산에서 지원되는 범위를 현행 취득세 합산액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재정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협력관제도를 의무화하여 교육청과 서울시 간의 연계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협력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교육협력관의 파견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각 시·도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실 중 ‘교육전문위원실’에 대한 직제 명을 ‘교육협력 전문위원실’로 개편하고,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는 창구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시·군·구의회 차원 :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시·군·구 의회 차원에서 제·개정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역시 보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규모가 그 핵심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각 구마다 지원비율이 다르고, 심지어 지원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구가 5개 구나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을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비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① 교육발전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② 평생학습도시 지정, ③ 장학금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운영적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가칭 「서울교육포럼」운영 및 정례화, ② 교육협력관제 설치 및 운영, ③ 대응투자 비용 조정을 통한 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사업 참여 유도, ④ 각종 위원회(협의회)의 정례화 및 내실화, ⑤ 자치구 단위 교육관련 위원회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합동워크숍 실시, ⑥ 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Ⅰ 논단Ⅱ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오면

박세훈(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1. 시작하며

교육정책이란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교육활동을 위해 공적으로 제시하고 시행하는 교육방침이다. 교육정책은 주로 교육활동의 목표나 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으로 제안한 것이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의 운영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성공은 학교현장에서 의도한 결과를 얼마나 많이 초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 교육 현실을 고려하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정책이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학교현장에 적용되는 많은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과연 일선 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교육현실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일수록 그 교육적 의미나 효과가 커짐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정책의 범주에 비단 교육행정에 관한 것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이나 교수 학습방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것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면 학교 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 학교장의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행정의 영역이 되어버린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선진화, 학교경영의 자율화, 및 사회적인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교육의 선진화를 추구하되 학교경영의 자율화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학교에 쏟아지는 교육정책 가운데 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 모두 아이들을 위한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사뭇 다르며, 현장의 교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없는 정책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의 교원들을 만나보면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의 문제를 많이 얘기한다. 그것이 국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 현실에 잘 맞지 않아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장의 문제가 조금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2. 교과교실제

지난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45개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과교실 구축', '학생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원 및 행정 인력과 교원 연수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2010년에 850억원의 국고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전국 647개교에 교과교실제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 3월 기준으로 2,000억을 투입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의 약 15% 정도인 총 806개교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부는 2014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면 확대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과교실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갖추으로써 내실 있는 수업 운영이 가능해지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수업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제고되고, 교사들도 교과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함으로써 수업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학급 중심의 수업형태에서는 학습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동일하게 교육시킴으로써,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생별·과목별 특성을 배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제7차 교육과정 때부터 교과교실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교과교실제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점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계속 자리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안정된 분위기가 조성되기 어렵고, 학습 분위기가 들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진형을 도입한 중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에게 적응기간도 없이 교과교실제를 적용하는 것은 수업의 집중도는 물론이거니와 학교적응력도 저하된다는 것이다.

둘째, 교실 안에서 길러져야 할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한 교실에서 하루 종일 부대끼며 좋은 것, 나쁜 것을 함께 보고 배우면서 때로는 친구들과 싸우고 화해하는 등 또래 집단에서 경험해야 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성격이 내성적인 학생의 경우 학기 초에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면 이동수업을 하면서 혼자 다니게 되는 등 자칫 왕따가 만들어지기 쉽다는 것도 교사들이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셋째, 교사들도 신설학교가 아닌 대부분의 기존학교는 시설부족으로 교사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교사간 유대감을 강화할 기회가 많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간 유대감의 강화는 학습공동체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듯 교사간 유대감이 약화되어 정보공유나 업무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의 효율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블록타임의 편성, 집중이수제의 운영,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대에 따른 전입생 관리의 문제, 탐구교과나 예체능 교과의 집중이수제로 국영수 위주의 교육이 더 강화된 점 등도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현장 교원들의 지적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전면 확대에 따른 문제들이 더 많이 노정되어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기 전에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운영의 모를 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단위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 학년별, 교과특성, 학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제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또한 활동이 왕성한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활동공간과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에게도 휴게실이나 동아리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정보의 교류나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교과교실제 수업을 위해 있는 공간도 없어지니 안타깝다. 집중이수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나 교육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교육청 산하의 교육연구정보원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과 배려가 절실한 듯하다.

3. 수준별 이동수업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시되었다. 기존의 교육은 공급자 위주의 교육 과정으로, 학생의 다양한 소질·적성 개발을 위한 학습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입시준비를 위한 암기 중심위주의 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수업형태로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적고,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및 학교생활 거부감 등이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자의 능력에 맞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학습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개별적인 학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능동적,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자는 현실적인 필요와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책과 학교현실은 분명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지적한 교과교실제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수준별 이동 수업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우려이다. 수준별 이동 수업에 대한 일선 학교현장의 우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준별 학습을 단순히 시험성적만 가지고 학습규모에 맞추어 편성하게 되면,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 학습능력의 편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 특히 하위집단의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기별로 학습을 재편성하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산만하

게 하고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수준별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습지도에 있어 수준별 학급에 따라 가르칠 내용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학습자료 및 수업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 질 때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는 크다. 그러나 수준별 학급은 편성되어 있으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반 준비가 미흡한 것이 학교현실이다. 아무리 훌륭한 학습자료 및 수업매체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르치는 수업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더욱 심각한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학생들은 수준별로 수업내용을 난이도를 달리하여 배우는데 평가는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기본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할 경우 심화반 학생들은 배우는 내용과 차이가 있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서 일정한 비율로 출제할 경우 기초반 학생들은 배우지 않은 내용을 평가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학생들의 불만족과 학부모의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행평가 시에 반별로 최고점수를 줄 있는 범위가 정해 있어서 상급반이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수준별 이동수업과 같이, 학습자의 능력에 기초해 동질집단을 구성하여 수업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업하기 편할지 몰라도 학습자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는 수업전략을 추구하는 협동학습이 그 성과나 상·하위 수준 학생간의 성취격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혁신학교 중 하나인 경기도 장곡중학교의 사례에서 검증된 바이기도 하다. 즉 장곡중학교의 경우 2009년부터 모든 교사가 협동학습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바,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보통이상 학생 비율이 9% 상승했으며, 기초학력 및 기초미달 학생의 비율도 줄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선 수준별 학급편성을 위한 「절대 평가 기준」을 시·도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위집단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그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보다 치밀한 교수·학습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열의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급편성시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장래 희망과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선택하지 않은 학급에서 만족할 학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준별 학급 재편성을 학기나 학년별로 조정하면 학생이 1회의 시험결과에 따라 자주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업분위기를 안정시키고 반 편성 및 출석부 관리 등 교사의 업무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교과협의회(학교별, 지역별)를 통하여 수준별 교수·학습 내용과 목표를 체계화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법 및 교재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평가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각 수준별로 달리 배우는 학습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수준별 출제 및 배점비율을 적절히 안배하고, 평소 지도되는 교수·학습 내용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어 참조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수준별 교수·학습과정에 투입되고, 또한 학

습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에 교사들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기본취지와 평가방법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국가차원에서도 수준별 수업을 위해 교원 증원과 함께 여유교실 활용, 기자재 구입,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당수 중소도시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강사 확보가 매우 힘든 실정이며, 강사를 확보했다 해도 강의실이 없어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낭비성 예산 투입도 막아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유행처럼 전자칠판을 구입하는데, 전자칠판의 경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으며, 고장이 나면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전자칠판을 잘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교사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적절한 활용 계획없이 시설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마치며

열린교육의 열풍이 유행처럼 교육현장에 불어 닥친 때가 있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열린교육을 한다고 멀쩡한 교실 벽을 허물었다. 전국적으로 들어간 예산을 생각하면 고소를 금할 수 없다. 얼마 뒤에는 허문 벽을 쌓느라고 또 난리를 겪었다. 아까운 정부예산만 들어간 꼴이 됐다. 최근 교과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시되면서 열린교육을 떠 올린 것은 비약일 수 있지만, 우리는 실패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에서 큰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교원들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를 위한 장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고 만다. 교육청에서도 문제를 알면서도 교과부 정책이니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의 형편에 맞게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의 입장도 그렇다.

교육정책의 시행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거나 보완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여 단위학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실적위주의 밀어붙이기식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일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위학교의 교원들이 중지를 모으고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많지만,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100년 앞을 내다보고 시행해야 할 교육정책이 10년도 못가서 폐기되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애꿎은 사람들만 고생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이 지속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논단 III |

도덕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신경과학적 접근

박선형(동국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일찍이 Nietzsche는 인간만이 얼굴을 붉힐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도덕적 수치심과 가치적 갈등을 겪는 영장류가 인간임을 명시한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생관에서부터 조직과 가정 속에서 사회인으로서 어떤 역할과 행동양식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생활규범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도덕적 가치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선택과 판단이라는 의사결정의 연속선상에서 삶의 전 과정을 영위한다. 간단하게는 식사메뉴, 출근복장, 교통수단, 이성과의 만남 등의 사적인 신변사항에서부터 조직발전을 위한 의제 구안과 실행, 평가 및 환류 등에 이르는 집합적 사안까지 개인의 선호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전통적으로 옳고 그름 및 바람직함을 다루는 도덕적 판단과 개별 선호와 효용의 갈등을 중재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합리성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현생인류를 지칭하는 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가 라틴어로 ‘현명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다른 어떤 동물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인간의 이성적 능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숭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성은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숙고의 결과로 간주된다. 따라서 욕망, 충동, 야성, 본능 등과 연관되는 동물적 감정은 인간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방해물로 간주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궁극적 억제 또는 영원한 제거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Descartes의 경우 인간을 합리성을 지향하는 신성한 영혼과 기계적인 욕망을 가진 육신으로 구분(심신이원론)하여 전자만을 강조하는 합리론을 강조하였다. Kant 역시 도덕철학으로서 ‘정언명령’을 개념화하여 도덕성도 순수이성에 근거한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감정과 어떠한 연관성도 가지지 않는 순수이성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화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성적 작용의 결과로 구현되는 합리성은 인간 문명과 삶을 규정하는 이상적 준거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행정학의 이론발달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⁹⁾ 그러나 최근의 과학적 발견, 특히 신경과학의 발달은 도덕판단과 의사결

정과정에 대한 두뇌의 작동기제를 체계적으로 구명하여 기존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성과 감정은 매우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정서적 지원이 없다면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도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의 상호 연계성을 밝히고, 관련된 신경과학적 설명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도덕성과 의사결정: 이성과 감정의 상호 연계성과 신경과학적 설명

학교나 가정을 불문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감정을 억누르라)’는 표현일 것이다. 우리의 성장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는 결코 과장된 언사가 아니다. 도덕성과 의사결정 연구에 있어서 이성적 사유와 합리적 사고는 강하게 작용한다.³⁾ 도덕이론에서 전통적인 세 가지 규범적 접근은 Mill의 공리주의, Kant의 의무론, Aristoteles의 덕 이론이다(Casebeer, 2003; Sandel, 2009).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를 산출한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상적 결과보다는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덕 이론은 개인·사회적 수준에서 덕을 배양하고 악을 피하는 것을 지향한다. 도덕적 갈등상황에 있어서 세 가지 접근은 각각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서 이성의 사유를 최대화하여 도덕 갈등 상황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는 Michael Sandel의 “정의론”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도덕 갈등 예문이다. 당신은 아래의 각 예문에 대하여 공리주의, 의무론, 덕이론의 관점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겠는가?

가상 상황 1: 다섯 사람이 달려오는 전차에 치어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고 당신이 전차선로 변경 스위치를 누르면 전차가 방향을 바꾸어 다섯 명 대신에 한 명이 죽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자. 당신이 스위치를 누르면 한 명은 죽고 다섯 명은 생존한다.

2) 전통 교육행정학(예: 이론화운동)의 이론적 근거인 행동과학적 접근은 과학철학 사상인 논리실증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분석 가능하거나 경험적으로 실증 가능한 대상만이 이론탐구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분석과 실증의 대상이 아닌 주관적 가치(감정, 도덕, 정서, 느낌 등)는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관심에서 철저히 배척되었으며, 이후의 이론발달사에 있어서 사실 이외의 가치에 대한 교육행정학의 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영수·박선형·박소영·김병찬·한유경·박수정, 2011, 2장 참조)

3) 의사결정 이론발달(만족화모형, 점중주의, 혼합정서모형, 최적모형, 쓰레기통모형)은 경제적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느 모형도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부각시키지는 못하였다.

가상 상황 2: 다섯 사람이 달려오는 전차에 치어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고, 당신은 아주 덩치가 큰 사람과 전차 선로 위의 육교에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이 옆 사람을 육교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면 전차가 멈추게 되어 다섯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당신은 왜소하여 스스로 뛰어내려도 전차를 멈추게 할 수 없다. 당신이 옆 사람을 밀면 한 명은 죽고 다섯 명은 생존한다.

두 가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세 가지 이론 중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 간에 현실의 세계에서 완전한 합리적 판단은 가능하지 않으며, 응답자 또한 판단과정의 심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 도덕이론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도덕갈등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보면 가상상황 I이 가상상황 II 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I의 경우는 응답자의 95%가 선택함). 인간이 합리적 동물이라면 도덕 갈등 상황 I과 II 간의 차이는 없어야 한다. 효용의 관점에서 보면 가상상황 I과 II는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1명을 희생해서 5명의 생명을 구함). 그러나 응답자들은 상황 II가 상황 I에 비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죄의식을 생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경과학은 인간행동의 결과에 대한 측정(행동과학접근의 주된 관심)으로는 알 수 없는 뇌의 활동과 작동기제를 비침해적 최신 기법(PET, fMRI 등)을 활용하여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도덕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있다.⁴⁾ 하버드대학 신경과학 교수인 Joshua Greene(2001)은 fMRI를 이용하여 각 상황에 대한 응답자의 뇌신경 활성화를 측정함에 의해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구명한 바 있다. I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다. 응답자는 공동의 선(선로를 바꾸어 5명의 생명을 구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 사고와 숙고적 계산을 하게 되고, 이는 합리적 사고를 전담하는 뇌의 전두피질을 활성화 시킨다.⁵⁾ 반면에 개인적인 도덕 갈등 사례로서 체구가 좋은 사람을 다리 위에서 밀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II의 상황은 개인적 혐오감과 죄의식을 생성하게 되고, 뇌의 정서영역(상측두구, 후측대상회, 내측전두이랑 등)을 작동시킨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II의 상황에서 다섯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명을 미는 행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Greene은 결국 도덕적 갈등 사례에 있어서 감정의 발현은 뇌의 합리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4) 의사결정과 도덕판단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최신 분야는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경제적(합리적) 인간관으로 대변되는 전통경제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학문체계로 주목받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Glimcher, Camerer, Fehr and Poldrack, 2009 참조)

5) 뇌의 활성화와 합리적 사고 또는 정서적 느낌은 서로 선후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하단의 예문은 가상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대응을 확인하고자 구안된 실험으로서 최후통첩(최후제안) 게임 사례이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안할 것인가?

당신은 만원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과 나눠 가지라는 지시를 받았다. 자신의 몫으로 만원 전액을 다 가져도 좋고, 일부 금액을 상대방에게 줘도 된다. 단, 상대방은 거부권을 가진다. 상대방이 당신이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면 당신의 제안대로 분배되지만, 거부하면 두 사람 모두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경제적 인간관(합리적 인간관)의 관점에서 보면 제안자는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금액(예: 10원)을 제시하고, 반응자 또한 최소액수라도 0원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안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게임 결과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자기 이익 실현을 위하여 10원을 제안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금액의 30-50%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행동은 어디에서 실험을 실시했던 간에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강미경 역, 2009: 288). 한편, 실험에 참여한 피제안자는 30% 이하의 금액을 제안 받은 경우에 불공정함을 느끼고 거래를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20% 이하의 분배는 피제안자 반 이상이 거부함). 그런데 흥미 있게도 거래에 앞서 슬픈(또는 불쾌한) 영화를 시청한 사람은 재미있는 영화를 시청한 사람보다 제안자의 거래를 더 많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으며 제안된 액수를 거부하였다(김원호 역, 2010: 390-398). 최후통첩 게임에 참여한 피제안자의 뇌작용을 fMRI로 촬영한 결과 불공평한 제안을 받은 경우 부정적인 감정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뇌섬엽(anterio insula)이 활성화되었고 이는 거부행동으로 나타났다(Sanfey, Rilling, Aronson, Nystrom and Cohen, 2003).

신경과학자들은 돈을 가진 사람 즉 제안자의 공정한 분배행동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류감정에 근거한다고 본다. 낮은 액수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분노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둘 다 한 푼도 못 가지게 될 것을 알기에 공평한 분배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타인의 마음을 읽는데 서투른 자폐증 환자의 경우 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대략 3분의 1이 상대방에게 0원을 제시하였다. 어찌 보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감정처리를 담당하는 뇌의 신경망 배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차가운 이성만이 아닌 따뜻한 감정 모두를 필요로 한다.

Ⅲ. 나가는 말

신경과학 연구 결과는 도덕판단과 의사결정과정의 이성적 합리성에만 의지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서와 감정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결정됨을 증명하고 있다. 뇌의 구조적 특성으로 볼 때 감정과 정서는 포유동물의 원시뇌로 불리우는 대뇌변연계에서 주로 처리된다. 인류는 진화론적으로 적자생존의 자연선택 압력 속에서 합리적 사고보다는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여 생존해왔다.⁶⁾ 도덕적 갈등에 직면하는 복잡한 현실세계에서 문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을 어떻게 균형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뇌신경과학은 도덕판단과 의사결정 행동의 신경적 기초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위한 출입구를 제시하고 있다. 가치기업(value enterprise)으로 규정되는 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원 조장하는 교육행정학은 신경과학의 최근 논의를 참조하여 감정과 분리된 이성의 동물이 아니라 감정과의 균형 속에서 “지혜로운 이성을 갖춘 호모사피엔스”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Ariely, D.(2011). 경제심리학(The upside of irrationality). (김원호 역). 서울: 청림출판 (원전은 2010에 출판).
- Casebeer, W.D.(2003). Natural ethical facts: Evolution, connectionism and moral cogn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 Glimcher, P.W., Camerer, C.F., Fehr, E., and Poldrack, R.A.(2009). Neuroeconomics: Decision making and the Brain. Oxford: Elsevier.
- Greene, J.D., Sommerville, R.B., Nystrom, L.E., Darley, J.M., and Cohen, J.D.(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ement. Science 293, 2105-2108.
- Lehrer, J.(2009). 탁월한 결정의 비밀(How we decide). (강미경 역). 서울: 위즈덤 하우스.
- Sanfey, A.G., Rilling, J.K., Aronson, J.A., Nystrom, L.E., and Cohen, J.D.(2003). The neural basis of economic decision-making in the ultimatum game. Science 200, 1755-1758.
- Sendel, M.J.(2010). 정의란 무엇인가?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 서울: 김영사. (원전은 2009에 출판).
- 정영수 · 박선형 · 박소영 · 김병찬 · 한유경 · 박수정(2011). 교육행정연구법. 서울: 교육과학사.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6) 현대 생활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보도로 갑자기 돌진하는 자동차를 보고 우리는 차의 초당 속도, 부딪히는 순간의 충격, 상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숙고하기 보다는 '위험하다'는 단순 느낌 그 자체만으로 신속하게 몸을 피하여 생명을 보존한다.

학회 활동 안내

1. 학술대회

◆ 제162차 학술대회 개최 완료

- 일시: 2011년 10월 22일(토) 10:30 - 18:00
- 장소: 광주교육대학교 인문사회관 541호, 542호
- 주제: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39차 연차대회 및 제163차 학술대회 개최 예정

- 일시: 2011년 12월 10일(토) 14:00 - 18:00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 주제: 교육의 정의와 한국의 교육정책

2. 세미나

◆ 제50차 KEDI 교육정책포럼 개최 완료

- 일시: 2011년 9월 16일(금) 14:00 - 17:20
- 장소: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21층)
- 주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를 중심으로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 주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비교교육학회, 한국행정학회

◆ 제5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개최 완료

- 일시: 2011년 10월 20일(목) 09:00 - 18:00
- 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주제: 학교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데이터
- 주최: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주최: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과정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

리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비교교육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3. 각종 회의 개최 현황

◆ 부회장선출위원회 1차 회의

- 일시: 2011년 10월 1일(토) 11:00
- 장소: 서울역 티원
- 안건: 제40대 부회장 선거 일정 논의

◆ 소석논문상위원회 회의

- 일시: 2011년 10월 13일(목) 11:30
- 장소: 남촌한정식(서울교대)
- 안건: 향후 심사 및 수여 일정 논의

◆ 부회장선출위원회 2차 회의

- 일시: 2011년 10월 14일(금) 19:00
- 장소: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106호
- 안건: 제40대 부회장 후보 확정 및 향후 선거 일정 논의

4. 부회장 선거 일정

◆ 부회장 후보(가나다순)

- 박세훈(전북대학교 교수)
- 이윤식(인천대학교 교수)

◆ 선거 일정

- 투표용지 배송: 2011년 10월 24일(월) - 11월 11일(금) (15일간)
- 투표기간: 10월 24일(월) - 11월 11일(금)
- 개표일: 2011년 11월 18일(금)
- 결과 발표: 2011년 11월 19일(토), 학회 홈페이지 공지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9권 (2011년)	1호	2월 28일
	2호(국문판/영문판)	5월 31일
	3호	8월 31일
	4호	10월 30일
		발간예정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 ◆ 원고분량: ① A4용지 20페이지(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100,000원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시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게재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 입금계좌: 농협 302-0327-9672-51 예금주: 임연기(교육행정학연구)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11년 8월 1일 - 2011년 10월 31일)

- 개인회원: 강혜원, 계오남, 고희정, 김국균, 김명숙, 김매이, 김명재, 김명희, 김지표, 김철필, 김택균, 김형선, 남진석, 박대권, 박영순, 박영호, 박해경, 배진현, 서자영, 서지연, 성은모, 손성욱, 송영범, 신은균, 안미라, 양원영, 양정인, 엄준용, 오여진, 오한아, 유병규, 윤수경, 이상훈, 이정연, 이지영, 이 환, 이희영, 장창성, 전하나, 정나나, 정우진, 정승희, 정효경, 조수연, 지향림, 최경철, 최숙희, 최재원, 황연우 (이상 49명)
- 기관회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 1기관)

◆ 연회비 납부 현황(2011년 8월 1일 - 2011년 10월 31일)

- 개인회원: 강영택, 강경석, 고광혁, 고학재, 권순형, 김영철, 김옥정, 김왕준, 나민주, 김은영, 김태호, 김효선, 박소영, 박영순, 박종필, 변수연, 송란호, 손희권, 신동한, 신봉섭, 신철균, 신현석, 신현정, 이기명, 이기용, 이석경, 이수정, 정선일, 정우영, 정하보, 조범진, 최혜연, 한혜원 (이상 33명)
- 기관회원: 한국교원대 도서관 (이상 1기관)

※ 정보가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연회비 납입 시 반드시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동향

◆ 축하드립니다.

주삼환 · 정일화 역(2011). 교육윤리 리더십. 서울: 학지사. Shapiro, Joan Poliner & Stefkovich, Jacqueline A(2011). Ethical Leadership and Decision Making in Education: Applying Theoretical Perspectives to Complex Dilemmas, 3rd. ed.(New York and London: Routledge)의 번역판

주요 소식

◆ 제162차 학술대회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성료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100여명 참여 박사학위 논문 발표자에게 기념패 수여

‘도시화, 지역화, 국제화 시대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학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2011 추계 학술대회(한국교육행정학회 제162차 학술대회)가 성료되었다. 지난 10월 22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광주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학

원생과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교육행정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교육정책’을 주제로 신현석 교수(고려대, 학술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총 5명이 발표를 하였다. 변수연·이희영·박해경 회원(고려대)이 ‘3不正책 논쟁에 나타난 옹호연합간의 상호적대화(devil shift) 현상 분석’을, 류민영·신상명 교수(경북대)가 ‘교원평가 정책추진과정의 시차적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송선영(서울대)·이수진(중국 북경대) 회원이 ‘한·중·일 고등교육정책 동향 비교연구-세계일류대학 육성정책을 중심으로’를, 김규태 교수(계명대)가 ‘번스타인 관점에서 본 교육정책에 따른 교직원 변화 분석’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고, 이준희 박사(고려대)가 ‘단위학교 책무성 정책변화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분석’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학교·학생연구’를 주제로 김남순 교수(조선대)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총 6명이 발표를 하였다. 김효정(서울영신초)·김민조 교수(청주교대)가 ‘학교변화 연구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1995-2011) -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를, 김상돈·김현진 교수(국민대)가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임파워먼트와 교직원 신을 매개로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분석’을, 배상훈 교수(성균관대)가 ‘마이스터고 진학 학생의 특성 연구Ⅱ: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를, 김병찬 교수(경희대)가 ‘핀란드 교육의 힘(1) : 핀란드 교육자치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고, 주도연 박사(천안구성초)가 ‘조기유학 귀국학생의 적응에 관한 연구’을, 정우진 박사(고려대)가 ‘중학생이 지각한 학급풍토가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토론자로는 염민호 교수(전남대), 조홍순 교수(광주여대), 백정하 박사(대학교육협의회), 이석열 교수(남서울대), 홍창남 교수(부산대), 송경오 교수(조선대), 박소영 교수(숙명여대), 박삼철 교수(단국대)가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이끌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이준희 박사, 주도연 박사, 정우진 박사에게 학회가 제작한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신현석 교수(사회자), 김남순 교수(사회자), 주도연 박사(발표자), 정우진 박사(발표자), 이준희 박사(발표), 임연기 회장 (좌측부터)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62차 학술대회 전경

◆ ‘교육의 정의와 한국의 교육정책’ 주제로 제39차 연차학술대회 개최 예정
12월 10일(토) 14:00-18:00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 컨벤션홀

오는 12월 10일(토)에 ‘교육의 정의와 한국의 교육정책’ 을 주제로 한국교육해정학회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허병기 교수(한국교원대, 본 회 부회장)가 ‘교육의 정의와 한국의 교육정책’ 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고교 다양화 정책, 교육선발 정책, 교육선발 정책, 교육책무성 정책, 교육재정 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자와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시간		발표 및 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사, 축사	
제1부	14:20~14:55	기조발표 ■ 발표주제 : 교육의 정의와 한국의 교육정책 발표자 : 허병기(한국교원대)	사회자 : 박삼철(사무국장)
제2부	15:00~15:30	■ 발표주제 : 고교 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 김흥주(교육개발원) 토론자 : 주철안(부산대), 박세훈(전북대)	사회자 : 김혜숙(연세대)
	15:35~16:05	■ 발표주제 : 교육선발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 박남기(광주교대) 토론자 : 김동석(한남대) 김수경(대학교육협의회)	
휴식	16:05~16:20	coffee break	
제3부	16:20~16:50	■ 발표주제 : 교육책무성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 신현석(고려대) 토론자 : 정수현(서울교대), 박종필(전주교대)	사회자 : 류현숙(교육개발원)
	16:55~17:25	■ 발표주제 : 교육재정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 반상진(전북대) 토론자 : 한유경(이화여대), 나민주(충북대)	
제4부	17:30~18:00	종합토론	좌장: 정영수(충북대)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 교육행정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kssea1@hanmail.net](http://www.kssea1@hanmail.net))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학회 메일(kssea1@hanmail.ne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대학/기관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단체메일 수신이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1@hanmail.net)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안내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회비납부: 920302-01-335498(국민은행), 예금주: 임연기(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302-0327-9638-91(농협), 예금주: 임연기(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106호

☞ E-Mail :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41-850-0858

☞ 회 장 : 임연기(011-9870-2053)

☞ 부회장 : 허병기(010-6268-6042)

☞ 사무국 : 박삼철 사무국장(010-6391-8277)

송유진 총무간사(010-2557-5907)

신하영 편집간사(010-9658-0624)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 국 교 육 행 정 학 회